

22. UR對備 建設技術政策 討論會

主催：韓國建設技術研究院

지난 3월 3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李載明)은 국내건설시장의 개방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할 기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UR대비 건설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제 1 분과 : 총론

I. 건설산업의 여건변화와 향후 기술정책 방향

윤 주 수(건설부 기술관리관)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

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 중심인 입찰·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지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II. 건설산업의 중요성과 건설기술 정책의 위상

박 병 무(수원대학교 교수)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기능 및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위치는 선진국 수준을 100으로 할때 70정도에 불과하며, 발전속도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건설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분류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원인이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용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성격 역시 자본절약형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수준 및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술수준의 낙후를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자유경쟁원리에 토대를 둔 경영효율, 기술혁신, 품질 등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정책은 건설기술개발의 체계화,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종합화 및 전문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I. 건설기술 R&D 체계 개선방안

박 칠 립<대우건설 전무>

건설 수요자의 질적요구수준의 급격한 상승에 부응하고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건설능력의 확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 기업체, 대학들이 건설기술의 고도화에의 필요성을 강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분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투자자에 대한 혜택부여,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혜택부여, 기술개발 보상제도, 기술개발투자 권고제도, Turn Key공사 발주확대 등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다종일품형 주문생산으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길고 불확실하며, 기술개발이 시장확보와 직결되지 않으며, 대규모 연구시설이 필요하고, 범위가 광범위하며, 생산활동의 장소 및 인력이 유동적인 건설산업의 특성과 R&D가 당면과제해결 중심이었으며, 개별적인 연구개발환경 등 주변여건의 미성숙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건설기술 R&D전략이 필요하며, 산·학·연과의 역할분담의 명확화와 협조체제를 통한 건설기술 R&D체계구축이 요구되고, 기술개발 및 활용체계의 명시적 구축, 그리고 연구개발 기반의 조성파 인센티브제도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연구개발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서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수행방법의 결정, 연구결과의 평가에 걸쳐 객관적이고, 산·학·관이 공감하는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II. 공공 연구기관의 R&D 체계 개선방안

유 경 수<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실장>

UR협상타결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건설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발맞추어 첨단과학기술을 건설산업에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현재 공공 연구기관의 R&D 체계의 문제점으로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 연구기능에 대한 기본 인식의 부족, 미래의 기술발전 방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도적 역할 부재, 공공 연구기관간 기능 미정립 및 조정 미흡, 연구기반의 취약, 연구인력 관리의 부적절, 연구조직상의 문제, 연구 결과의 실용화 미흡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 연구기관의 R&D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연구사업 수행체계의 정립, 연구기반의 강화, 연구인력관리의 개선,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관리강화 등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Ⅲ.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방안

이 규 재<대림산업 이사>

건설산업의 장래는 건설기술의 선진화 실현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달려있으며, 기술선진화는 건설기술연구에 대한 인적, 물적투자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 연구의 실사용자이며 실용화 단계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민간기업의 기술연구개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규모와 연구인력측면에서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비해 민간기업 연구원의 전문기술능력은 상대적으로 손색이 있는 편이지만, 향후의 사회 환경 및 기술발전패턴이 민간주도형으로 완전히 바뀔 것을 전제로 하면 결국 21세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앞날은 민간기업의 기술연구 전문가 집단의 양 어깨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관련 행정당국과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모든 연관산업분야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각고의 노력과 자성으로 미래의 한국건설이 세계 일류의 건설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Ⅳ. 기술정보의 유통 활성화 방안

권 오 룡<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관리실장>

건설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의 적기입수는 기술경쟁시대의 주요과제이며, 국내외 환경변화 및 기술정보의 다양화와

정보량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정보의 신속한 입수체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술정보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수집 가공 관리 및 축적된 정보의 유통체계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건설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정보유통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정보유통에 필요한 표준화 사업추진, 건설정보망 구축운영, 건설기술 정보유통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정보센터를 주관으로 참여기관별 역할 및 투자를 분담하여 국내건설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건설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기 위한 기술정보유통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보유통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우선 기술문헌 정보 DB의 정착과 정보표준화 분류체계 정립 및 신기술 정보 수집확대 등을 통한 정보유통 기반확립을 도모하고, 정보표준화 대상확대와 교육, 연구전산망, 타정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건설정보망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V. 건설 기술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방안

신 동 우(아주대학교 교수)

건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인 기술인력의 현황을 보면 양적인 문제보다는 취약한 교육여건, 실무와의 거리 등으로 인한 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건설기술 인력의 육성 방향은 산업으로 부터의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분석, 대학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주요 방안으로는 산학협동을 통한 협동교육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실시하는 학위과정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초기투자비용이 작게 소요되는 반면, 활성화 시의 파급효과는 대폭적으로 가시화되며 전략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한 특수건설대학원으로서의 발전까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산학협동이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면서도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산과 학의 효혜적인 입장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쌍방간에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타 분야의 경우는 산학 공동체의 활용사례가 국내·외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산학협동 교육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산물을 기업과 대학이 공유하는 메카니즘의 확립은 절실하다 하겠다.

제 3 분과 : 국제계약과 분쟁

I.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계약 및 CLAIM관리

함 오 연<삼환기업 이사>

Claim은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율적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계약방식과 관행, 발주자의 시공자(감리자 포함)에 대한 우월적 지위, Claim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등으로 인하여 Claim의 예방, 관리, 운용의 실효성과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라 자본, 기술 및 공사운용 기법이 앞선 선진국의 대형 건설업체가 국내건설시장에 대거 진입하게 되면 그 상황은 급속히 변할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선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라 예상되는 주된 Claim사항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 경제적 위험부담에 관련된 사항, 설계 변경과 관련한 기술상 또는 공사비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공기 지연에 대한 발주자 책임 관련 사항, 하자발생 또는 사고에 따른 사항 및 기술특허와 면허에 관련된 지적소유권 침해 관련사항 등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Claim을 고려하여 정부기관 등 발주처와 건설산업 관련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책 강구가 필연적이다. 즉, 계약 및 Claim에 대한 발주자 및 시공자간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발주자, 특히 정부 기관에서는 공사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품질보증, 적정경비를 고려한 입찰 및 계약제도와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Claim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각 발주자별 또는 프로젝트별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관리와 분쟁의 조정관리에 숙달된 인력을 양성하고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체제를 구축하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Ⅱ. 국제화시대 건설기술과 지적재산권

신 응 식<신신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건설업계의 건설기술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와 관련된 중요 이슈로는 미국독점금지법 (ANTITRUST ACT)의 해외적용이다. 미국은 외국기업이 불공정경쟁으로 미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경우, 이 기업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시키는 독점금지법의 해외적용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러한 독점금지법이 일본의 건설업에 적용된 예로서 미군기지에 대한 입찰 담합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미 법무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당한 배상금을 받아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미군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담합행위가 문제되곤 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미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큰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건설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설계에 관해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침해에 대한 보호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밖에 건설장비와 재료·설계시공기술의 특허침해 및 기업의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와 노하우인 영업비밀(TRADE SECKET)침해가 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의 기술고도화 및 국제화, 개방화,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선진기업들과 기술에 관한 많은 지적재산권분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특허전담 중재기관을 설치하여 건설업계의 21세기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Ⅲ. 선진국 건설기술 설계용역의 이전사례

편 도 권<유신설계 부사장>

UR협상으로 인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기술력 중 특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프로젝트 설계분야의 기술력 향상에 대한 크게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선진국 건설기술 설계용역의 이전사례(영종도 신국제공항 기본설계, 경부고속전철 노선선정(전산화 설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건설시장의 국제화·개방화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였다.

설계용역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입찰 및 계약제도에 있어서 가격경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및 공사비, 산정시 공사의 품질보다는 예정가격 중심의 설계 등을 지적할 수 있고, 또한 외국회사의 입찰참가시 국제관례와 불일치함에 따라 클레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 건설기술의 이전에 있어서 외국기업 참여시 Consortium지분책임제로 과업의 분할수행으로 인한 공동작업기회의 감소 및 전산화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의한 선진기술의 이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건설기술용역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화에 적합한 기술용역분야의 제도개선과 기술경쟁체제의 계약방식의 채택, 설계도서의 국제규격화·국제공용어발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국기업 참여시 기술이전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분과 : 기술용역 관련 제도

I. 외국의 건설사업 추진절차(I)

— 발주처의 추진절차 —

강 호 익(한국도로공사 단장)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 및 건설사업 시행절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발주처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사업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가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더불어 각종 claim요소들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공업자는 시공일변도의 해외진출을 지양하고 건설사업의 전단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입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 도입, 내역입찰제의 정착화, 부대입찰제의 확대실시, 최저평가 낙찰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요소들이다.

업체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정부 및 공적수출 금융기관의 금융지

원 확대 및 홍보, 관민합동 지원체계 구축, 관련업체와의 콘소시엄 장려, 관·산·학·연 공동연구 및 대응 모색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설업은 선진국에 대해 부문별로 어느정도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지속적인 관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건설 제도 및 절차의 국제화, 정부의 민간지원책 강화,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II. 선진국의 건설사업 추진절차(II) - 시공자의 추진절차 -

설 영 화 <경화Eng. 전무>

건설사업의 추진절차 중 건설기술향상과 밀접하고 제도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입찰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국제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 입찰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경우 기술력의 차이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국내업체들이 외국건설회사들에게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최저가 입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외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찰결과평가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 과정은 입찰 후 엔지니어링 회사가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시공방법, 기술사항 등을 검토한 후에 입찰결과 평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입찰자가 공사수주와 직결되는 시공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때 엔지니어링 회사는 입찰결과 평가 뿐만 아니라 공법소개, 분쟁방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므로 최저가 입찰제도를 국내건설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찰결과 평가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며 그에 앞서 입찰결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감리회사를 국제수준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회사와 영세한 감리회사의 책임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보험제도의 도입이 실현되어야 한다.

Ⅲ. 미국의 기술용역 제도

이 증 도<미국 Leedco Eng. 사장>

UR협상의 타결로 국내 건설 기술 용역 업계는 해외 건설 기술용역 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대비와 해외시장 개척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술선진국인 미국의 기술용역제도의 현황과 관행을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해 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기술용역에 있어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간단한 견적서와 면접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대규모의 경우 기술자격서나 기술제안서 제출공고로 시작되어 기술적인 능력과 용역비를 근거로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등 그 과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건설 및 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그 체제나 Marketing 원칙에 있어 관급 프로젝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주정부 마다 정해 놓은 건설 허가제, 감독제, Building Code의 집행, 기술면허제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술용역의 추세로는 Turn Key 또는 Engineering Construction제도가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제도적 현황과 그 장단점 파악을 통해 국내업체에서는 우리 형편에 맞도록 유연하게 변경, 조정하여 현명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Ⅳ. 건설기술용역 관련제도 개선방안

박 태 권<동명기술공단 사장>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건설기술용역회사 설립요건 및 관리체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공공사업을 주로 하는 용역회사의 설립요건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보완, 개정하여 일원화시켜야 하며 건설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술자와 용역업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설계용역과를 설치운영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대폭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발주기관에서는 기술개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밀한 검토를 거쳐 여유있는 용역기간으로 발주토록 한다. 정부는 용역사의 기술개발투자를 위해 세제혜택과 기술개발보전비등을 적극 지원하며 용역비를 현실화하여 전문기술자가 1년에 60%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40%는 R&D에 할애하도록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의 경우 PQ를 거쳐 선정된 용역업체의 LONG LIST를 작성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후보업체의 SHORT LIST를 작성한 후 PROPOSAL를 제출토록해서 제1후보와 가격협상하고 여의치 못할 때에는 제2후보자 순으로 업체를 결정하도록 한다. 끝으로 이러한 건설기술용역관리 체제상 제도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혁신시키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물거품식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와 현안문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용역사를 한데 묶어 총체적인 개선안(PACKAGE INNOVATION)을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V. 계약서 · 설계서 등 계약문서 작성방법 개선방안

이 교 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국내 건설 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따른 건설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수준 향상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의 현실로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재조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사라 함은 계약서와 설계서에 따라 공사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계약 이행은 흔히 발주자와 공사를 실제로 담당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한 수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약서와 설계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아무리 계약서와 설계서에 근거하여 충실히 시공을 한다고 하여도 부실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공사를 단순히 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의 성실도 여부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므로 계약문서 작성업무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약서 및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는 부실공사의 방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계약 서류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내 건설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작성방식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할 기본적인 계약의 의미, 계약서의 형식, 내용과 함께 계약문서의 하나인 시방서의 의미, 형식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VI. TURN KEY 제도의 개선 방향

최 상 열<쌍용건설 전무>

Turn Key제도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기술력 향상을 촉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입증되어 보편화된 제도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실적이 미비하고 Turn Key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Turn Key제도의 조속한 활성화 및 Turn Key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고에서는 예산회계법 관련 계약제도, 발주단계, 입찰단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정, 설계확정 및 계약단계의 5단계로 나누어 Turn Key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산회계법 관련 계약제도에서는 예산관련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발주단계에서는 Turn Key입찰 대상공사의 확대 및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기구개편 및 Turn Key제도의 환경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찰단계에서는 입찰도서의 간소화, 적정 설계기간의 확보, 설계지침의 간소화 등을 제시하였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정에서는 기술심의회 발주자 기술평가 반영, 설계점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공개 심의 제도 채택, 심의기간 및 방법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계확정 및 계약단계에서는 FAST-TRACKING에 의한 공사관리 방법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집 쓰레기가 우리집 의식수준